

<http://dx.doi.org/10.7236/IIBC.2016.16.4.171>

IIBC 2016-4-25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연구

A Stud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private sector for disaster management

유순덕*

Soonduck Yoo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등장함에 따라 재난관리에 민관협력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다. 이를 위해 현행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했다. 재난안전분야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확보, 둘째,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콘텐츠 발굴, 셋째,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참여를 유도 및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활용기금 확보, 넷째,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방안 지속 추진, 다섯째, 사회공헌활동 참여기업 브랜드 가치제고와 인센티브 강화이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분야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으로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연구는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이 재난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설문지 등을 통하여 연구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importan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disaster management. This study was evaluated by experts specializing in the improvem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disaster management. The following items are needed to encourage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n the disaster security industry. The researchers first propose a solution by means of ensuring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networks. Second, we propose for those entities to discover new means to support private companies' participation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he researchers' third solution is to be utilized to secure funding for induction and to support public-private partnerships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private companies. Our fourth solution is promoting a sustainable plan for raising public awareness of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Finally, the social contribution of the participating companies enhance brand recognition and as well as incentives.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the current operating system to support relevant policies and measures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enterprises in the field of disaster security. Future research will be to study (such as through questionnaires) ways to participate in disaster management companies in accordance with environmental changes.

Key Words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ublic safety and security, Private sector, Strengthen incentives, Disaster management

1. 서론

기업의 사회공헌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은 사회복지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난안전분야에

*정희원, 한세대학교 경영학부 e 비즈니스 (교신저자)
접수일자 : 2016년 4월 16일, 수정완료 : 2016년 7월 17일
게재확정일자 : 2016년 8월 5일

Received: 16 April, 2016 / Revised: 17 June, 2016 /

Accepted: 5 August, 2016

*Corresponding Author: harry-66@hanmail.net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sei University, Korea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2014년 세월호 등 대규모의 재난사고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자원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재난안전분야에 사회공헌활동으로 참여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CJ대한통운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오염사고 발생 시 보유한 차량지원을 하는 협력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난안전분야의 민간기업 참여는 저조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기업이 재난안전분야에 사회공헌 형태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방법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개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단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재난안전분야에 기업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1. 연구 설계 및 방법

본 연구는 민간기업의 재난안전 분야 사회공헌 활동에서 등장하고 있는 문제점을 추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로써 전문가를 통해 문제점의 원인 파악과 해결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견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리하는 델파이 기법을 이용했다. 델파이 기법에 적용을 위하여 전문가 15인을 패널로 선정하여 진행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패널은 재난분야 전문가인 대학교수 3인, 정부 재난관리 분야 업무담당자인 8인과 표준협회 소속 1인, 재난관리 전문연구원 3인으로 총 15인이 참여했다. 연구에 참여한 패널들은 2015년 11월에 2차례 미팅을 통해 진행되었다.

분석방법은 선정된 15인의 패널 중에서 일부가 발제자로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질의사항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 했다. 현행 재난안전분야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2차 협의에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종 개선방안은 업무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선별했다.

II.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민간기업 사회공헌

1. 민간기업의 사회적책임

세계지속가능발전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이 윤리적으로 활동하고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한편, 근로자와 그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와 사회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정의 했다^[1].

일반적인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논의하면, 경제적 책임인 지속적인 이윤창출을 통한 기업 존속과 발전, 법 및 규범 준수, 투명경영, 윤리경영, 재정적 책임인 사회공헌 활동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책임 기업은 환경, 인권, 노동, 지배구조, 소비자, 사회참여, 공정한 조직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ISO 26000에서 사회적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란 정부, 기업, 노동계, 민간단체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의 지배구조 개선, 인권, 노동, 환경, 공정한 조직 운영,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등 7개 핵심 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소속된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활동 및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의미한다^[2].

ISO 26000 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중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활동도 있지만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공헌 활동인 민관협력 중심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인 재난안전 관리에 있어서 민간 협력은 민간기업이 중앙정부, 지자체 또는 시군구와 협력하여 공공재적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ISO 26000에서 제시하는 사회적책임 중에서 지역사회 공헌을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해석하여 연구했다.

2. 사회공헌 활동 단계

기업이 수행하는 사회적책임(CSR)의 발전단계를 Lakin & Scheubel(2011)은 1단계 기초, 2단계 개입, 3단계 혁신, 4단계 변혁으로 구분하고 있다^[3].

1단계의 기업은 특정한 전략 없이 자선 및 기부활동을 함으로써 CSR에 접근한다. CSR을 시행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윤리·도덕성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나 세금 등의 혜택이고, 주로 CEO나 그 배우자의 취향에 맞는 분야 및 활동에 기부한다. 어떠한 분야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일회성을 띠고 있다. 피상적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혹은 기업 CEO 비리 등의 문제를 덮기 위해 실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기업의 경영활동과는

관련 없이, 특정한 관리자도 없이 운영되며, 이에 대한 보고나 검증도 거치지 않는다.

2단계 기업의 CSR 특징은 자선 및 기부활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관리하고,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인 성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영향이 있는 계획을 후원한다든지, 고객들에게 자선적 의미를 갖는 물품을 제안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CSR을 함에 있어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고 이와 관련된 실행지침이 있다. 기업 이미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CSR을 담당하거나 CSR 겸임 또는 전담 관리자가 존재하며, 주로 현금 및 현물 기부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자원봉사를 통해 진행된다. 또한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자사가 실시하는 CSR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한다.

3단계의 기업은 2단계보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에 직접 참여하고자 한다. 기업과 사회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주는 사회적·상업적 이익을 인식하여 CSR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의 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토대로 기업의 핵심 역량과 밀접하게 연계하도록 한다. 또한 CSR을 사업과 연계하여 능동적으로 추진하며 다른 사업 부서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CSR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공헌 능력을 구축하고 사회적 역량을 입증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며,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CSR활동에 대해 검토를 받는다.

4단계는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의 경영활동과 통합되어 공유가치창출(CSV : Creating Shared Value)의 가치 경영을 실현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기업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익 창출의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CSR을 실시한다. 따라서 CSR 활동이 사업전략 및 기능들에 통합되어 설정해 간다. CSR의 수단은 기업에 따라 다양하지만, 전 단계에서 시행되었던 금전자산 및 경영자원, 자원봉사 외에 차세대 혁신을 도출하는데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실험 수단 등이 활용된다. 또한 주요사업의 담당 조직과 통합된 구조를 갖춰 기업 내 CSR을 체화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CSR 관련 활동들에 대해 독립적인 회계감사를 받음으로써 외부에 투명성을 보장한다.

사회적기업 연구소와 동아시아 연구원의 조사 분석(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주로 2단계, 중견, 중소기업은 1단계의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2단계의 특성을 띠고 있으나 구조 조직 부분에서 체계적인 틀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3단계 활동의 기초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3.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필요성

국내 민관협력 운영은 주로 행정자치부 주관 하에 지방자치단체별 복지, 환경, 문화, 정책홍보, 부패방지, 취업, 예산 등 각 개별 분야에 있어 추진 및 실행되어지고 있다. 또한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복지사업에 관한 민관협력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고용촉진을 위한 상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고용안정센터 등이 연계한 취업 민관협력사업, 부패방지 분야에도 청렴국민감시관, 옴부즈만 제도 등을 민관협력 방식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

재난관리에 기업의 사회공헌의 필요성이 등장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대형화, 다양화, 복잡화되어 가는 반면, 정부주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의 한계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타 공공분야에 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경우 국내 민간기업의 참여는 아직 불충분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의 경제활동의 주체인 민간기업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부터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 유지를 위한 예방·대비 능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이 알려지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기업시설은 물론 조업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폭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재난으로부터 기업의 생산 및 경제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위험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는 점차 현 대기업의 생존조건이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민간기업 내부의 자체적 위험관리와 기업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민간기업의 재난안전관련 사회적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민관협력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재난을 위해 자원(Resource)와 물류(Logistics)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필요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 결과 국민(소비자)을 보호하고 또한 재난피해로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가가 적절한 재난대응을 통해 시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민관협력을 민간기업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정부와 협력함으로써 정부와 관계강화를 통해 기업의 정부사업 참여기회가 증가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재난대응 참여에 따른 기업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또는 적절한 재난대응을 통해 소비자가 보호됨으로써 시장경제에 파급효과가 적어서 지속적인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

III. 민간기업의 재난안전분야 사회공헌 실태 및 문제점

1. 국내기업의 재난안전분야 사회공헌 현황

국가별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규모를 비교하면, 한국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2009년 120억원 수준으로,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빠른 증가 추세이며 2006~2009년 CAGR 기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총 지출액 증가율

(13.7%)은 미국(0.8%), 일본(0.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¹⁵⁾.

국내의 경상이익 대비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액 비중은 2009년 4.8%에 달하며, 이는 미국의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기업 등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가 강한 반면, 국내 기업 중심의 기업의 사회공헌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소비재는 ‘청소년 교육’, 헬스케어는 ‘의료·보건’, IT는 ‘고등 교육’ 등 업종별로 집중하는 활동분야가 서로 다르다.

다른 업종과 달리, 금융업은 ‘마이크로 파이낸스’ 등 개인 및 지역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활동 비중이 높다. 국내 은행은 ‘미소금융사업’ 등 개인 및 지역경제 지원활동 비중이 높으나, ‘의료·보건’ 활동 비중은 낮다.

미국 기업과 비교할 때,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은 단순 기부 형태의 ‘사회·공공복지’ 활동에 대한 지출이 높다¹⁶⁾. 재난안전분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파악을 위해 국내기업들 중에서 두산인프라코어, SK, 삼성, CJ대한통운, 현대그룹 및 기타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는 쓰촨성 지진 현장의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두산 굴삭기 총동원령을 진행하여 참여한 사례이고, SK플래닛(주)의 경우는 T맵 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도로 충격정보를 경기도에 제공함으로써 경기도의 포트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한 경우이다. 또한, SK인천석유화학은 화학물질관련 전문 인력양성 등 화학물질 예방에 대한 사업을 지원했다. 삼성은 삼성3119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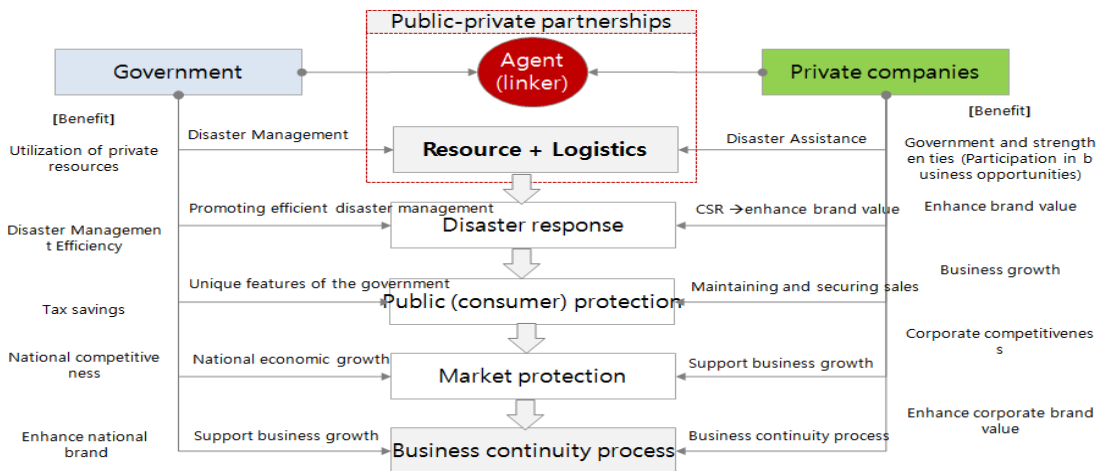


그림 1. 재난관리차원에서 정부와 기업의 기능연속성

Fig. 1. Continuity capabilities of companies and governments in terms of disaster management

통해 이천물류창고 화재진압을 효율적으로 수행한 사례이다. CJ대한통운은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해양오염 사고 시 자원이동을 위한 물류협력지원을 하고, 현대그룹은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안전 상식을 방학기간 동안에 학습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11월 22일 (구)안전행정부, 정몽구 재단과 세브란스 병원이 협력하여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구축사업단을 발족했다. 손해보험업계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폭설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동대책반을 운영하여 재난발생 진행 상황에 따른 예상 단계별 위기 대응 시스템을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신한은행 재난지원활동과 (주)포스코의 재해복구 기금참여와 임직원 및 대학생 봉사 참여 등이 있다. 국내의 경우 일부 대기업이 재난안전분야에 기업의 사회공헌 측면에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중에서 재난안전 분야 참여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 해외기업의 재난안전분야 사회공헌 현황

미국, EU 및 독일 등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의 핵심역량에 적합한 부문에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기업이 직접 도움을 주는 동시에 미래의 잠재적 소비자층을 확보하는 상생활동 추진한다. 이를 지원하는 제도 인프라로 세계혜택, 동액보조 프로그램, 정부의 보조금 지급, 시상, 인증 등이 있다. 관련 대표 사례로서 GE, 코카콜라, 쉘, 노바티스, 소시에테테제네럴, 바이엘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전략적 기부(Strategic Contribution) 또는 인도주의적 직접투자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에 적합한 부문에 사회공헌 활동을 전략적으로 접목한 것이다. 즉 시급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업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미래의 잠재적 소비자층을 확보하는 상생전략이다.

미국 정부는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금혜택, 동액보조(Matching grant) 프로그램,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한다. 미국 정부는 매년 국무부의 해외 우수 사회공헌활동 미국기업 선정 시상을 제공한다(KOTRA, 2010)^[7]. 미국기업의 주요활동 사례는 전염병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 및 제공하는 머크(Merk)사와 환경 분야 R&D 자금투입으로 태양열 기관차, 공해 저감 항공기 엔진 개발하는 GE를 들 수 있다.

EU의 경우, 자발성에서 '책임'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CSR 분야에서 기부 및 자선활동은 중심에 두지 않는 등

대상을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제한하고 있다^[8].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 인증제 시행, CSR 보상강화, 교육, 훈련, 연구에 CSR 통합(재정지원) 등 이 있다. 대표적인 활동기업으로는 국민국에 치료약 개발 및 무상제공(순이익 5%, 포춘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제약회사) 하는 Novatis 와 환경 분야 집중 개발(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저탄소 바이오 연료 개발 등)하는 쉘이 있다.

독일은 국가 차원의 CSR 행동계획(Action Plan) 도입을 했다(2010). 독일산(Made in Germany)을 CSR과 연계시켜 사회공헌을 다한 독일산(CSR-Made in Germany)이라는 새로운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 기업은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CO² 방출 저감 기술 개발하는 바이엘이 있다.

3. 재난안전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문제점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도출된 국내의 민간기업의 재난안전분야 사회공헌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첫째, 정부와 민간기업간 협력네트워크 미비이다. 둘째, 기업의 재난안전분야 사회공헌 활동 참여 미미이다. 셋째, 재난안전분야에 사회공헌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자금 부족하다. 넷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미비이다. 다음은 기업의 재난안전분야 사회공헌활동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정부와 민간기업간 협력네트워크 미비

2014년 연말에 닐슨코리아가 진행한 700여 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절반이 넘는 68.6%가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활동이 85.1%로 가장 많았으며, '농어촌지원'(55.8%), '환경보호'(40.2%), '문화, 예술 및 스포츠'(40.2%) 순으로 나타났다^[9].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만들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절반 이상(52.1%)은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파트너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를 파트너로 택하고 있다. 공유가치창출(CSV : Creating Shared Value)을 위해 많은 민간기업들이 공공

기관을 포함하는 ‘사회공헌 생태계(Ecosystem)’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들이 민간기업과의 네트워크 부족으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기업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나. 기업의 재난안전분야 사회공헌 활동 참여 미미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13년 매출순위 1위~1,000위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공헌(CSR) 규모는 약 총 3조 2천억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⁰⁾. 사회복지: 45%, 교육·학술: 16%, 문화·스포츠: 9.4%, 재난구호: 1.3%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책임 부분에서 타 분야에 비해 재난분야의 기업의 지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⁴⁾.

기업의 경우 재난관리 분야는 매년 재난발생 빈도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일회성 기부성격으로 재난분야 투자는 당연히 국가책임이라는 인식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안전분야의 경우 기업의 사회공헌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모델과 콘텐츠가 부족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측면에서 재난안전분야의 참여는 매우 미비하다.

다. 재난안전분야에 사회공헌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자금 부족

재난관리 기업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각 기관들과 협력하여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각 성공사례에 대한 홍보와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세금으로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를 보유하고 있다.

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의 이익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인식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조사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포함해 기업이 속한 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일체(59.7%)” 또한 “기업의 브랜드 가치 창출활동(21.8%)”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기업이 국가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한 참여 시각이 순수한 사회공익 차원 보다는 기업의 가치창출 또는 활동의 연장선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어 순수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하

는 사회공헌 측면으로 지원의 기능이 미약하다.

마.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업의 인센티브 미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 시키는 제도적 인프라로 인센티브가 있다. 인센티브는 금전적인 것과 무형의 정책적 배려를 들 수 있다. 금전적인 인센티브로는 세금혜택, 동액보조(Matching Grant) 프로그램과 정부의 보조금 등이 있다.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의 내용이 복잡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 기부금에 대한 조세 혜택이 개인기부금에 비해 작은 편이다. 개인 기부금에 대한 조세 지원의 범위는 20%~100%로 소득공제를 하고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5~10% 한도 내에서 순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IV. 민간기업의 재난안전분야 사회공헌 방안

민간기업의 재난안전분야 사회공헌을 보면,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이 정리되었다. 첫째,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확보, 둘째,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콘텐츠 발굴, 셋째,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참여를 유도 및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활용기금 확보, 넷째,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방안 지속 추진, 다섯째, 사회공헌활동 참여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와 인센티브 강화이다.

1.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확보

재난관리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재난관리 관련 자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기업들은 재난관리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참여를 진행해야한다. 정부 역시 이를 유도하기 위한 소통채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해야 기업이 재난예방 활동 및 재난 발생 시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와 기업 간 신뢰와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함으로써 재난관리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확대를 지원 하는 콘텐츠 발굴

점차 높아지고 구체화 되어 가고 있는 국민들의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부족하여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표 출되고 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기업이 지속 가능 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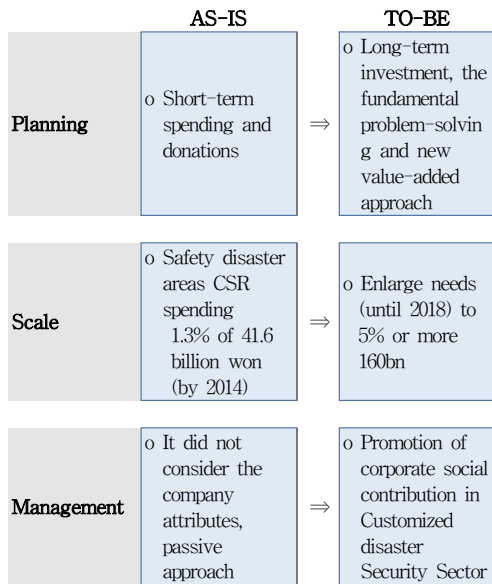


그림 2. 사회공헌의 방향
 Fig. 2. Direction of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12]

현재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참여하는 경향은 단기적 및 자선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동적이다. 기업의 사회적 참여를 실시하는 기업들은 직원복지를 위한 활동, 빈민층에 대한 기부를 가장 활발히 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가고 있지만 참여형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4 기업 및 기업재단 대표 사회공헌프로그램 사례집」에 따르면 재난관리 분야에는 소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11]. 따라서 기업의 사회공헌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참여 모델과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 즉 기업이 재난관리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재난에 참여한 국내의 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재난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재난재해 분야 협력사업 발굴로 기업이 보유한 재능을 직 간접적으로 재난관리에 적용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가치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공헌을 추진해야 한다.

간접적인 참여 방식으로는 정부 또는 지자체와 기업 재단, 재능을 보유한 기업과 MOU 등 협력을 통하여 발굴된 모델을 재난관리 시장에 적용하고 이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

직접참여 방식으로는 재난관련 분야에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정부와 협력하여 관련기술을 직접 개발하여 재난관리 시장에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3.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참여를 유도 및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활용기금 확보

세월호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성금이 나 보상으로 해결됐지만 이는 일시적인 보상금으로 재난 관리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재난은 항상 발생할 수 있으며 위험은 점점 고도화 되어가고 있는데 규제는 점점 완화되는 게 문제이다. 따라서 사고가 대형 복합 재난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 대비하는데 사용되는 기금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는 재난 발생 후 이를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지만 다양한 재난 예방 활동 등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민간기업이 재난관리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기금이 부재하다. 따라서 재난대책예비비, 특별교부세, 복원기금등과 같은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하여 기업의 사회활동 유도, 재해복구 및 재난 예방에 투자하는 재난예방 및 활용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기금은 민간기업 재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재난 예방에 활용되어 재난관리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일정수준 재난예방 활용 기금 도입은 기금재원의 확보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재난활용기금은 국민여론 수렴, 기금신설 심의 등을 통해 재해예방기금 설치에 대한 타당성 확보가 필요하며 기금신설이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방안 지속 추진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방안으로서 “국민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20.2%)”과 “나눔 문화의 사회적 확산(20.2%)”이 가장 필요하다고 조사 되었다^[13]. 이는 기업과 대중 간에 접점이 많아질수록 자사의 사회공헌 활동에 정서적 지지자를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민간단체, 학계, 지자체 등 사회 각계와의 파트너십 역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눔 문화의 사회적 확산이 선행될 때 국내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 주요기업들은 대중과의 연결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이 참여하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중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시민들과 민간기업이 운영에 실제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가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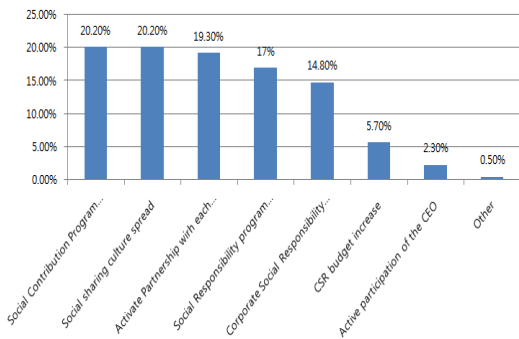


그림 3.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 조사
Fig. 3. National Awareness Survey Plan for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14]

5. 사회공헌활동 참여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와 인센티브 강화

사회공헌 활동에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요인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환원률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사회공헌 활동은 단기적인 홍보에 그치며 참여가 쉽지 않다는 인식 변화를 위해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적극적인 기업의 브랜드 가치향상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에

다른 브랜드 가치 제고와 인센티브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사회공헌 참여기업의 경우 가산점 부여, 보험료 할인, 세제지원, 재해경감 설비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조달, 시설공사, 용역 등의 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부여 하고 있다.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요율을 차등적용 받을 수 있어 보험료가 할인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이 밖에 조세특례법 및 지방세법 등에 따른 각종 세제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기부금 소득공제(20~100%)에 비해 법인 기부금의 지원(5~10%)이 너무 적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사회참여활동이 제 3, 4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만이라도 조세지원이 독일 수준인 20% 수준까지 상향조정하여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V. 결 론

재난으로부터 기업의 생산 및 경제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위험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는 점차 현대기업의 생존 조건이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재난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기업 내부의 자체적 위험관리와 기업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민간기업의 재난안전관련 사회적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안전분야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은 첫째,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확보, 둘째,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콘텐츠 발굴, 셋째,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참여를 유도 및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활용기금 확보, 넷째,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방안 지속 추진, 다섯째, 사회공헌활동 참여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와 인센티브 강화이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분야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으로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연구는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이 재난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설문지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Kim Min-hee, Baekseokhun, Practices and Implication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2.
- [2] ISO 26000.
- [3] CSR Monitor : Evalu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ocial Commercialization Strategy, East Asia Institute, 2014.
- [4] Nick Lakin, Veronica Scheubel, Corporate Community Involvement, Greenleaf Publishing, 2011.
- [5] Giving In Numbers 2010, CECP
- [6]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ts strategic implications, 2012.
- [7] KOTRA, 2010.
- [8] Jung Whoshick,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major cases and implications, The Bank of Korea Research, 2007.
- [9] Social contribution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ecomes more sophisticated when it comes to Nielsen Korea!, <http://tr.en.nielsen.com/kr/ko/insights/2014/columnpublic-sector-enterprise1.html>
- [10] FKI, 2013.
- [11] [13] Social Contribution Program Fact Sheet of Corporate and its Foundation, FKI, 2014.
- [12]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plan in Disaster safety areas,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4.
- [13] 2013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urvey, 2014.
- [14] 2014 major corporations, corporate foundations CSR white paper, FKI, 2015.

저자 소개

유 순 덕(정회원)



- 1991년 2월 : 국민대학교 수학과(학사)
- 1994년 2월 : 연세대학원 수학과 (이학석사)
- 1995년 12월 : 영국뉴카슬 대학 응용수학 (석사)
- 2010년 3월 ~ 2013년 2월 : 한세대학교 IT융합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조교수
<주관심분야 : 전자금융, 창업 및 벤처, 빅데이터, 정부정책, 개인정보 및 보안>